

I. 정치 및 경제 현황

1. 정치·외교 현황

가. 근대 정치연혁

□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

-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고, 수주일내 폴란드는 몰로토프-리벤트롭(Molotov-Ribbentrop) 협정에 의해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 통치됨.
- 2차 세계대전 중 지하정부의 대 독일 독립투쟁이 지속된 가운데, 1944년 8월에는 Home Army(AK)가 바르샤바 봉기를 주도함. 1945년 2월, 영국, 미국 및 소련의 알타 정상회담으로 유럽의 영토분할이 결정되어 2차대전 이전의 폴란드 동부지역이 소련으로 병합되는 대신 독일 동부지역이 폴란드 영토로 재 편입됨.

□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산정권

-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전역이 공산화되면서 중앙정부의 계획 경제, 소련 중심의 교역 및 외교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창설되었고 폴란드 통합노동자당(Polish United

Workers' Party: PZPR)이 정권을 장악함.

- 폴란드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국유화되었고 인프라 재건 및 공업 기반 확충에 있어서 중앙 계획적 통제경제가 지속되어 노동생산성 제고 및 신기술 산업에 대한 자원투입 효과가 저하됨.
 - 가격조절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농업, 식품 가공·배분의 취약성이 식품부족 현상을 야기하면서 1970년 그단스크(Gdansk) 조선소를 중심으로 시위 및 노동투쟁이 빈번히 재연됨.
- Gdansk 조선소의 시위가 진압되었지만, 시위 이후 당시 장기 집권한 공산당 Wladyslaw Gomulka 총재가 진보주의적 정당 총재인 Edward Gierek로 교체되는 결과가 초래됨.
 - Gierek 집권당수는 Gdansk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여 경제개혁 및 개방정치를 약속함. 1970년대 폴란드는 경제침체, 정치위기 및 국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외채상황이 어렵게 되었고 긴축경제정책으로 주요 생산품 및 식품부족현상이 유발된 점은 1980년 8월, 연대노조(Solidarity Trade Union)가 창설되는 역사적 배경이 됨.
- 노조(조선소 전기공 Lech Walesa), 공산당(Wojciech Jaruzelski 장군) 및 로마 가톨릭 교회(Jozef Glemp 추기경)의 3자간 회담이 추진되었으나 1981년 12월 13일, Jaruzelski 장군이 긴급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연대노조 활동인사들이 억류 또는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함.
 - 1989년 3월 정부당국에 의해 원탁회의가 성사될 때까지 연대노조 정치활동은 일체 중지됨.

□ 공산체제 붕괴 이후의 민주화정권

- 연대노조운동(Solidarity Movement)은 공산정권 붕괴 이후 급진전되어 1989년 9월 초대 총리에 연대노조 출신인 Tadeusz Mazowiecki가 임명된 이후 1990년대 내내 연대노조는 수많은 정치그룹으로 분열됨.
 - 예를 들면, PZPR은 1990년에 자발적으로 해체된 이후 사회민주당성향의 민주좌파연맹(SLD)¹⁾을 재구성함.
- 1989년 8월 이후 제3차 총선에 해당되는 1993년 총선 당시 개혁에 지친 유권자들은 post-Solidarity 그룹 대신 PZL과 연합한 SLD를 지지하였으며, 199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Walesa가 SLD 총재인 Aleksander Kwasniewski에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됨.
- 1997년 총선에는 연대노조운동의 Marian Krzaklewski 신임총재가 가톨릭, 가족 및 애국심 등 전통적인 폴란드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SLD 후보를 제치고 총리로 당선되어 정권교체를 실현함.
- 2001년 9월 총선에서 Krzaklewski 계열 연대선거행동당(AWS)이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당시 SLD 총재인 Leszek Miller에게 정권을 내주었는데, 2001년 총선은 자위당(Samoobrona), 폴란드 가족당(LPR)과 같은 급진정당의 출현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 1990년대 초 결성된 최대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PZPR 계열의 정당들도 포괄하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출범함.

□ 2004년 5월 EU 가입

- 2001년 총선에서 승리한 SLD 정부는 2002년 말 EU 가입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03년 6월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폴란드는 2004년 5월 유럽연합(EU)에 공식적으로 가입함.
- SLD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경제부진 및 연속적 정치스캔들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2003년 3월 Miller 총리는 폴란드농민당(PSL)²⁾과의 연정을 해산하고 여소야대의 소수정부를 유지하다가 EU 가입 이후 Marek Belka 전임 재무부장관이 총리로 임명됨.
- 2005년 총선에서는 post-Solidarity 계열의 중도우익 성향인 법과 정의당(PiS)³⁾이 승리함으로써 시민강령당(PO)⁴⁾을 제치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PO당과의 연정이 실패하면서 여소야대가 재연됨.

나. 최근 정치상황

□ 2007년 연정붕괴 및 조기총선 실시합의

- 2007년 4월 PiS당 소속 Marek Jurek 하원의장이 지지자들을 이끌고 탈당한 데 이어 신당 창당을 선언함으로써 보수우파 연정의 지속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함.

2) 1990년에 결성되어 공산주의자 통합농민당(ZSL)의 후속 정당으로 평가받음.

3) 2001년 초 극우보수 성향의 정당으로 Jaroslaw Kaczynski 전임총리에 의해 출범함.

4) 2001년 창설된 자유보수 성향의 정당으로 정당 발기인의 대부분은 연대노조운동 출신의 정당 소속임.

- 2007년 7-8월, 카진스키 총리가 Andrzej Lepper 부총리와 Janusz Kaczmarek 내무장관을 전격 해임한 데 이어 SD당 소속 각료 2명(노동부·건설부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SD당은 사실상 연정에서 탈퇴하였으며, PiS당의 또 다른 연정 파트너인 LRP당이 SD당과 합당(가칭 ‘폴란드 지위동맹’)함으로써 우파연정의 붕괴가 가속화됨.
- 2007년 8월 7일 SD당과 LRP당은 카진스키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내각인선, 정부예산 및 사회복지 정책 등을 둘러싸고 PiS당과 연정 파트너 정당간의 심각한 정책대립과 견해차가 발생함.
- 2007년 8월 9일, 카진스키(Lech Kaczynski) 대통령(임기 5년, 1회 연임 가능)은 PO당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재와 동년 10월경 조기총선 실시에 합의함. 보수우파 연정이 붕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기총선 실시에 동조하는 경향은 정국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해산을 통해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다수정당에서 4대 정당 중심으로 하원의석 분포

- 예정보다 2년 앞서 2007년 10월 21일 실시된 폴란드 하원(Sejm)의 원5 선거에서 중도우파 제1야당이었던 시민강령당(PO)이 최다 득표로 정권이 교체됨. 정당별 득표율은 PO당 45.5%, 법과 정의당

5) 중선거구 비례대표제(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별로 4-10명의 의원 선출)로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한해 선거구별로 정당 득표수에 따라 의석(460석, 임기 4년)이 배분됨. 상원(Senate)은 중선거구 다수대표제(인구비례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2-4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FPTP 방식)로 선출(100명, 임기 4년)됨.

(PiS) 32.1%, 민주좌파그룹(LiD) 13.1%(원내진출), 폴란드농민당(PSL) 8.9%, 자위당(SD)과 가족당(LRP)은 5% 미만으로 나타남.⁶⁾

※ 보수우파 연정의 우경화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지지 유권자(도시지역 청년층)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으로 분석됨.

- 총선 투표율은 54%로 1989년 공산정권 붕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2005년 총선 투표율은 민주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40.5%를 기록한 바 있음.
- 총 46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서 PO당은 209석을 획득하여 PSL당(31석)과의 연정구성으로 과반수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함. 반면, 총선이전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166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 하원은 2007년 11월 5일 개원되었고, PO당은 10월 23일 투스크 총재를 총리후보로 공식 추대하였음. 또한, 카진스키 대통령의 지명으로 11월 9일, 투스크는 총리로 확정됨.

6) 2005년 9월 총선에서 시민강령당은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으나 도시지역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로 실제 투표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법과 정의당(농촌 유권자와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 지지)에 패배한 바 있음.

<그림 1-1> 2007 총선결과 하원 의석분포 및 투표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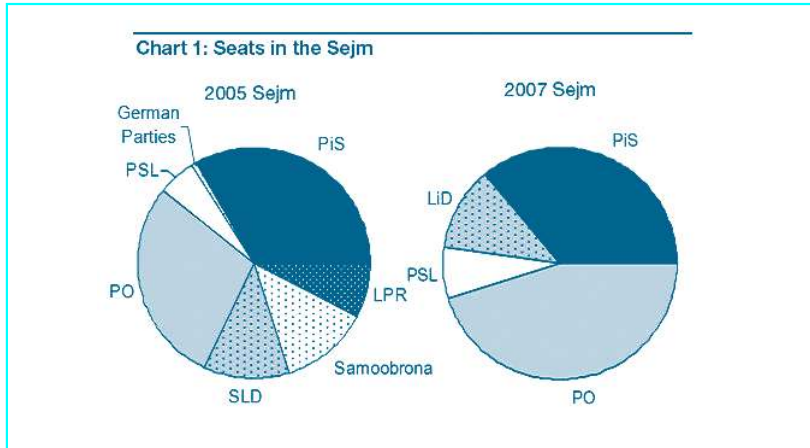


Table 1: Vote Results

	Sejm Seats		Popular Vote	
	2005	2007	2005	2007
Law and Justice (PiS)	155	166	27.0	32.1
Civic Platform (PO)	133	209	24.4	45.5
Self-Defense (Samoobrona)	56	--	11.4	1.53
Democratic Left Alliance (SLD)/ Left and Democrats (LiD)	55	--	11.3	--
League of Polish Families (LPR)	34	54	8.0	13.1
Polish Peasants Party (PSL)	25	--	7.0	1.3
German parties	2	31	--	8.9

자료: IIF, Country Report: Poland, Oct. 2007.

□ 여당패배 및 야당승리 요인

- 경제개혁 추진성과 부진에 대한 평가
 - 레흐 카진스키(Lech Kaczynski) 대통령⁷⁾과 야로슬라브 카진스키(Jaroslaw Kaczynski) 총리가 이끄는 총선이전 정부의 선동적 대중영합주의(populism), 급격한 우경화에 대한 지식인 계층, 기업인 등 폴란드 유권자의 우려가 이번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지난 2년 동안 보수우파 연정은 사회후생에 중점을 두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경제정책 노선을 취하였음.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 개인소득세 등의 조세제도 개선, EU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의 경제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PiS당이 SD당과 LPR당과의 공조로 경제개혁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재정통합 노력이 소수연합 정권으로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경제구조개혁 자체가 지연되어 왔음. 또한, 카진스키 총리는 정부 개입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경제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민영화 추진실적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음.
- 불안한 연정구성에 따른 경제상황 변동성 확대
 - 2005년 9월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PiS는 우파 소수정당들⁸⁾과 2006년 5월에 연정을 구성했으나 여소야대의 정권구성으로 내각인선 및 정책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나는 등 불안한

7) 국민투표로 직접 선출되며 5년 임기로 중임 가능함.

8) 자위당과 가족당은 극우파 정당임.

연정을 유지함.

- PiS당이 이끄는 보수우파 연정은 예산안 처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으로 갈등을 보여 2006년 9월 SD당이 탈퇴하여 연정이 일시적으로 붕괴됨. 이후 PiS당이 SD당과 연정을 복원함으로써 조기총선은 피할 수 있었음. 그러나 동년 11월 지방 지자체 선거에서 PO당의 승리로 연정의 결속력이 약화되기 시작함.
- 2007년 들어 카진스키 총리가 연정 파트너인 SD당 당수 안드레이 레퍼 부총리겸 농업부 장관을 동년 7월 해임함으로써 정치권이 다시 동요되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9월 SD당(농민계층 지지) 및 LRP당(가톨릭계 민족주의 성향) 출신 각료의 전원 해임으로 연정이 붕괴되어 결국 9월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이 의결됨.⁹⁾

□ 내각인선으로 신정부 공식 출범

- 2007년 11월 16일, 카진스키 대통령이 투스크 신임 총리와 각료 18명을 임명함으로써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PO당은 지역 및 지지계층 기반이 매우 달라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PSL당(하원 제4당)과의 연정을 공식 출범시킴.
- PSL당에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을 포함한 3개 각료직 할당
- 무소속 인사 6명, 여성 각료 5명 등 각료 평균 연령 49.5세

9) 2007년 9월 7일, 제5대 하원은 찬성 377, 반대 54, 기권 20의 표결로 재적의원 2/3 이상(307)의 찬성을 얻어 의회 해산안이 통과됨. 또한, 폴란드의 정국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총선이 불가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카진스키 총리와 법과 정의당은 총선이 실시될 경우 재집권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단을 미뤘음. 그러나 사실상 연정이 붕괴된 상태에서 조기총선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 조기총선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됨.

- 투스크 총리는 재무부, 법무부 등을 포함한 주요 6개 부처 각료로 무소속 전문가를 발탁하였으며, 여타 각료들도 대부분 소속정당 내 전문가로 알려진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실무진영을 구성함.
- 2007년 10월 총선이 反 PiS당 정서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재정개혁, 의료제도 개혁 등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부담도 큰 것도 사실임.
- 신정부는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는 한편,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화합·대화를 통한 EU내 신뢰회복, 대독 및 대러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내각인선에서 카진스키 대통령이 시코르스키 외무부장관, 치비온 칼스키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질문제를 거론한 점 등 향후 PiS당 카진스키 대통령이 PO당 소속의 투스크 정부와 얼마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국정운영의 최대변수임.
- 2007년 10월 총선 직후 최초로 실시된 여론조사(11.8)에서 PO당 53%, 법과 정의당 25%, PSL당 11%, 민주좌파그룹 7%의 지지율을 보여 연정을 구성한 PO당과 PSL당이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전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 및 민주좌파그룹은 지지율 하락세를 나타냄.

<표 I-1> 내각 주요인사(2009년 5월말 현재)

구 분	명단(소속정당)	비 고
대통령(국가원수)	Lech Kaczynski(PiS)	2005년 10월 당선(임기 5년)
총리(국정실권)	Donald Tusk(PO)	2007년 10월 당선(임기 4년)
부총리(내무부)	Grzegorz Schetyna(PO)	
부총리(경제부)	Waldemar Pawlak(PSL)	Economy
재정부장관	Jacek Rostowski	Finance
외무부장관	Radoslaw Sikorski(PO)	
재무부장관	Aleksander Grad(PO)	Treasury
중앙은행 총재	Slawomir Skrzypek	

자료: EIU, *Country Report: Poland, June. 2009.*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주요 입법안 처리 난항

- PiS 당 소속인 카진스키 대통령은 2008년 7월 공영방송미디어 개혁에 관한 입법안, 2008년 11월 보건제도 개혁에 관한 입법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하고 향후 논쟁중인 입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힘으로서 PO 당과 정국운영에 관한 시 각차이가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었음.
- 다만,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입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하원 으로부터 60%이상의 동의를 필요함.
- 집권 연립정부인 PO-PSL 당은 충분한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 은 상태이므로 대통령 거부권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중도좌파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추진중인 법안들이 당간 입장차이가 큰 법안들 많아 향후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 - 중도우파 PO당의 승리

- 금년 6월 8일에 치러진 폴란드내 유럽의회선거¹⁰⁾ 결과, 집권 중도우파인 PO당이 25석(44.4%), 제1야당인 PiS당이 15석(27.4%)을 확보하며 집권여당이 크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5년전 유럽의회 의원선거에서 PO당의 지지율이 24%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PO당은 2007년 10월 총선에서 45.5%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승리한 데 이어 금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둬으로써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 밖에 민주좌파그룹(LiD)이 6석(12.3%), PO당과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폴란드농민당(PSL)이 4석(7%)의 득표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다. 대외관계

□ 대 EU 외교관계 호전

- 2005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의 2007-13년 예산협상 결과, 폴란드는 673억 유로의 EU 구조조정기금 수혜를 확보하면서 폴

10) 총 736명의 EU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의원(MEP)을 선출하는 선거로 EU27개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국가별로 의원수가 할당되며 5년간의 임기가 부여됨. 폴란드는 총 50석의 의석수가 배정됨.

란드 정부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았음.

※ 당시 Marcinkiewicz 총리는 취임 이후 해외 첫 순방으로 영국 Tony Blair 총리를 방문하는 등 영국, 독일, 프랑스와의 외교관계 강화에 노력하였음.

○ 2007년 6월,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EU 헌법조약(the new EU constitutional reform treaty, 일명 리스본조약) 제정내용 중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의 가중다수결(QMV) 의결제도¹¹⁾ 도입 시기를 폴란드 정부의 요구대로 당초 2009년에서 2017년으로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의회는 2008년 4월 초 리스본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카진스키 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 이 조약이 비준되면 본인도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유럽 헌법조약은 2005년 부결된 문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서 2007년 7월부터 정부간회의(IGC)를 통해 조약의 최종안이 연말까지 마련된 후 2008년 중 회원국 비준을 거쳐 2009년 상반기 발효될 예정이었음.

○ 독일 등 주변 EU 회원국들은 폴란드 총선에서 친 EU 정책을 표방한 PO당이 승리한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¹²⁾하고 있으며,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에 비판적인 투스크 총리의 등장으로 정부의 대 EU 및 대미 외교·안보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남.

○ 다만, 카진스키 대통령이 2010년 10월까지 임기가 헌법상 보장받고 있어 PO당 출신 총리와의 외교·국방정책 등에서 갈등이 우려되나,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은 독일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

11) EU 정책결정 조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 필요

12) 주세 미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차기 폴란드 정부와 유익한 협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시민강령당의 승리를 환영하였음.

의 관계개선과 대 EU 경제협력을 통해 폴란드 실리를 모색하고 있음.

- PiS당의 독일에 대한 대립각 외교노선으로 폴-독 관계는 악화되었지만, PO당은 대독 관계 재정립을 선언하는 등 양국간 관계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2012~13년 유로존 가입을 계획하고 있는 현 정부는 차기 대선과 총선(2011년 예정)에서 유로존 가입을 위한 정치적인 여건들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대미 외교,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

- 대미 관계는 폴란드의 이라크 파병 등으로 긴밀하게 유지되어 왔음. 2007년 7-8월 미-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동유럽 배치 미사일방어(MD) 기지를 폴란드(요격 시스템) 및 체코(레이더기지)에 설치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미-폴 양국간 군사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바 있음.
- 2008년 3월, 투스크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MD 기지설치를 위한 구체적 협상을 실시(2011-13년 건설완료)한 데 이어 동년 8월에는 폴란드 정부가 공식 합의함(계약체결).
- 그러나 PO당과 투스크 총재는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라크 주둔 폴란드 병력의 철수를 공약하였으며, 미국의 동유럽 MD 기지를 폴란드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NATO 회원국인 폴란드 정부는 미국과 안

보협력 분야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대러 관계,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

- 폴란드의 대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가 폴란드의 원유·가스의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만이 아님. 특히, 2004년 말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당시 친서방진영의 Viktor Yushenko에 대한 폴란드의 지지 및 정치적 개입 이후 폴-러 관계는 악화됨.
- 더구나, 2008년 8월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에서 폴란드의 그루지야에 대한 강력 지원, 미국의 동유럽 배치 미사일방어 기지 설치 합의 등으로 러시아와는 매우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고 있음.

2. 경제 현황

<표 I-2>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지표 비교
(2008년 기준)

(단위: 억 달러,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GDP	5,257	1,538	1,750	954
인구(백만 명)	38.1	10.1	10.2	5.4
1인당 GDP	13,795	15,490	21,240	17,455
경제성장률	4.9	0.5	3.2	6.4
실업률	9.8	7.8	5.4	7.7
소비자물가상승률	4.2	6.1	6.3	4.6
재정수지/GDP	△1.9	△3.4	△0.9	△2.3
상품수출	1,753	1,066	1,457	699
상품수입	1,990	1,065	1,394	709
경상수지/GDP	△5.4	△8.1	△3.1	△6.7
외환보유액	589	338	365	178
총외채잔액	2,049	1,642	886	476
D. S. R.	21.4	37.3	10.1	10.0
환율(연평균, 달러)	2.41	172.1	17.07	20.2

자료: EIU, *Country Report* 및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09.

가. 국내경제

(1) 최근 경제동향

<표 I-3>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제성장률	3.6	6.2	6.7	4.9	-0.8
재정수지/GDP	△2.9	△2.4	△1.4	△1.9	△3.8
소비자물가상승률	2.1	1.0	2.5	4.2	2.5

자료: IMF, IFS, 2009 및 EIU, *Country Report: Poland*, June. 2009.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세 시현

- 폴란드는 2006년 유로존의 경기호조로 인한 수출 증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FDI 유입증대 등으로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007년에는 건설(주택) 및 유통부문, 고정자본투자 및 민간소비 부문의 급성장으로 6.7%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풍부한 숙련 저임 노동력,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 및 EU 가입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으로 FDI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2008년 3분기까지 건설부문의 급성장, 민간소비 및 고정자본투자 증가의 지속으로 5.5%의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반기중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유로존 실물경기의 급속한 침체 및 기업투자의 감소로 2008년 4분기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연중 4.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지만,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고 수출의존도가 40% 수준의 낮은 관계로 서유럽의 경기침체 여파를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헝가리(0.5%), 체코(3.2%) 등 주변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경기위축 예상

- 경기부양을 위한 소득세 감면은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침체

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기업신뢰지수 등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며, 특히 실업률이 2008년 말 9.5%에서 2009년 4월 말 11%로 상승하고 있는 점이 우려됨.

- 외국인투자 유입분의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총투자 부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위축 등으로 2009년 1분기 0.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경제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함.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폴란드도 받았으나 주변 중부유럽 국가 중에서는 타격을 가장 덜 받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표 I-4> 중부유럽 4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구 분	2006	2007	2008 ^e	2009 ^f	2010 ^f
폴 란 드	6.2	6.7	4.8	-0.7	1.3
헝 가 리	4.0	1.1	0.6	-3.3	-0.4
체 코	6.8	6.0	3.2	-3.5	0.1
슬 로 바 키 아	8.5	10.4	6.4	-2.1	1.9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Europe, May 2009.

□ 2009년 설정된 재정수지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

- 폴란드는 2006년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세수증대 등으로 GDP 대비 2.4%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7월부터 발효되는 사회보장부담금 감축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에 힘입어 2007년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

치인 300억 즈워티(107억 달러 상당) 이내로 억제되면서 GDP 대비 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에는 부양가족 세금공제, 사회보장부담금 추가감축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개선이 쉽지 않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수준은 1.9%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다소 악화되었으나, 목표치인 271억 즈워티(113억 달러 상당)의 적자규모를 크게 하회한 246억 즈워티를 기록하였으며, 중동부유럽 평균 수준보다는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됨.
- EU의 유럽국민계정체계(European System of Accounts, ESA95) 기준으로 산출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9%를 기록하여 유로존 가입기준인 3%를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 정부는 2009년 1.7%의 경제성장률 달성이라는 낙관적인 전망하에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182억 즈워티(55억 달러 상당)로 설정하며 전년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크게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 1~4월중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금년초 개인소득세 인하조치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법인세 수입의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이미 2009년 목표치의 84%(150억 즈워티)까지 확대된 상황임.
- 이에 반해 Jacet Rostowski 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2009년 중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상향조정할 계획도 시사함.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전망

- 2006년 농산물 작황부진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통화강세 지속, 3분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를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소매매출 증가, 임금상승 및 고용증대 등의 원인으로 소폭 상승한 2.5%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영국 등 EU 회원국으로의 근로자 이주에 따른 실업자 감소 등으로 가속화된 실질임금 상승, 생물연료(biofuels) 수요증대 등에 기인한 식료품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를 기록하였음.
- 2009년 들어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를 기록하였으나, 2월말 동유럽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즈위티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입 식료품 및 연료가격이 상승하며 3월에 3.6%, 4월에 4.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4월 들어 즈위티 통화가치가 소폭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근로자의 귀국으로 인한 임금 하락 및 경기침체의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을 감안할 때,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동유럽 경제위기가 진정되며 주가 및 통화가치는 완만한 회복세

- 2008년 11월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헝가리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촉발된 동유럽경제위기는 2009년 2월 들어 EU 등 선진권 투자자들의 대외투자자산 회수 움직임이 순식간에 확대되

며 위기가 심화되었음.

- 즈워티화 통화가치 및 바르샤바증권거래소의 WIG20주가지수도 본격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점인 2008년 9월말부터 금년 3월까지 각각 30% 이상 크게 하락하는 등 외환·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었음.
- 그러나 2009년 4월부터 즈워티화의 변동성이 완화¹³⁾되고 있으며, WIG20 주가지수도 연중저점 대비 30% 이상 반등하는 등 주가 및 통화가치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2) 주요 경제정책

□ 2007년 10월 정권교체로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 선회

- 2007년 10월 21일 조기총선에서 중도우익 성향의 PO당이 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는데, PO당은 기업 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지향함.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취임이후 의회 정책연설에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정부간섭을 줄이며 과감한 민영화를 통해 폴란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유로화를 조기에 도입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공표함.
- PO당은 공공지출 통제, 재정수입 증대, 공적채무 감축, 인플레이

13) 환율은 2009년 2월 17일 저점(4.88PLN/EUR)에서 6월 11일 4.49PLN/EUR로 안정되었으며, 주가지수는 2월 17일 연중저점인 1,327.64에서 6월 19일 1,965.17로 반등함.

선 억제 및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로화 도입 등 대 EU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점진적 경제개혁 추진

- 친기업적 우파성향인 PO당은 급진적인 개혁정책보다는 EU의 통합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EU회원국과의 관계개선, 경제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의 경제개혁 조치를 제시함.
- 다만, 카진스키 대통령은 의회법안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총리(PO당)와 대통령(PiS당)간 갈등관계가 잠재되어 있으므로 PO당이 의회법안을 크게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각 인선, 경제개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급진적인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하원의 60% 찬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신정부 집권연정의 하원의석은 240석으로 60% 의석에 해당하는 276석에 비해 36석이 부족한 상황이고 중도좌파인 LiD당과의 정치적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임.

□ 2008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며 3.75% 유지

- 2007년 들어 폴란드 중앙은행(NBP) 통화당국(MPC)은 국제유가, 임금 및 식료품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 경기과열 우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준금리를 8차례 지속적으로 인상하며 2008년 11월까지 6% 수준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08년 10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되자 통화당국은 경기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225bp를 인하하며 사상 최저수준(3.75%)을 유지하고 있음.
- 3-4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범위인 1.5%~3.5% 수준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통화당국 내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부가 논의중이지만, 폴란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는 대신 은행권 인정담보를 확대하는 등 여신을 증대하고 지분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대외거래

<표 I-5>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경 상 수 지	△37	△94	△201	△285	△199
경상수지/GDP	△1.2	△2.8	△4.7	△5.4	△5.2
상 품 수 지	△28	△70	△171	△237	△205
수 출	964	1,175	1,453	1,753	1,353
수 입	992	1,245	1,624	1,990	1,559
외 환 보 유 액	405	461	627	589	..
총 외 채 잔 액	988	1,258	1,707	2,049	1,765
총외채잔액/GDP	32.5	36.8	40.2	38.9	45.9
D . S . R .	27.7	23.8	19.4	21.4	30.4

자료: IMF, IFS, 2009 및 EIU, *Country Report: Poland*, June. 2009.

□ 2009년 들어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 폴란드 경상수지 추세는 상품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1999~2005년 중 경상수지 적자가 빠르게 축소되어 왔음.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999년 7.6%에서 2005년에는 1.2%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2006년에는 자본재 수입증가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 외국인투자자의 해외송금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폭 증가 등으로 GDP 대비 2.8%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2007년에도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의 확대 및 외국기업의 투자송금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4.7%로 악화되었음.
- 2008년에는 폴란드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과 EU기금유입 증가로 경상이전수지 흑자는 지속되었으나 국제고금리, 폴란드 내 외국기업의 이윤송금 증가 및 민간부문의 해외차입 지속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가 증가하였으며,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며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를 기록하였음.
- 2009년 들어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수입의 급격한 감소, 경상이전수지 및 소득수지의 개선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2009년 1분기 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2008년 1분기 71억 달러)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또한 2009년 1분기중 47억 달러의 투자금액이 폴란드 은행산업으로 유입되며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중 경상수지 적자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성장세의 둔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수준은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유로채 발행, IMF FCL자금 수혜 등 대외차입의 잇따른 성공

- 2009년 4월 15일, 15억 유로 규모의 유로채를 발행한 체코에 이어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중 두 번째로 7.5억 유로 규모의 유로채 발행(2014년 만기)에 성공하였음.

- Jacet Rostowski 재무장관은 동 유로채 발행을 폴란드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체코와 폴란드가 최근 발행한 유로채 가산금리가 각각 190bp, 280bp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편임.

- 금년 5월 6일에는 IMF가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를 통해 폴란드에 대해 205억 달러(155억 유로 상당)의 자금 지원을 승인하였음.

- 이번 지원은 멕시코(47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IMF는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금년 3월 24일 FCL을 도입한 바 있음.

□ 2012년 예정이었던 유로존 가입은 지연될 전망

- 1990년 체제전환 당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 달러화 대비 고정환율제도가 시행되었고, 1991년에는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동적인 crawling-peg 시스템을 채택함. 1990년대 후반 들어 즈위티화의 변동폭이 점차 확대되어오다가 2000년 4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전면 시행함.

- 이후 폴란드는 2012년 유로화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유로화 가입조건 충족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유로존 가입시점이 예정보다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존 가입조건 중 하나인 ERM II (EU 환율조정메커니즘) 채택에 대해 총리(PO)와 대통령(PiS)간 정치적인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유로화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도 난항을 겪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폴란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유로존 가입을 위해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해야 되는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009년에는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¹⁴⁾

□ 외채상환부담 경감

- 폴란드 정부는 1991년, 1994년에 각각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하여 채권단과 채무 리스케줄링에 합의하였음. 동 합의에 따라 당시 외채의 50%(순 현재가치 기준) 정도가 탕감되고, 나머지는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에서 각각 2014년, 2024년까지 채무상환이 연장되었음.

14) 지난 5월 12일자 Financial Times 지와의 인터뷰에서 Rostowski 재무장관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2009년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2012년 예정이었던 유로존 가입은 1년 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고 언급함.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의 2009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외채상환부담은 감소

- 2009년 5월 폴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년 폴란드가 상환해야 하는 총외채금액은 639억 유로이며, 이중 361억 유로는 해외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분으로 만기연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됨.
- 2005년에는 장기 유로채권 발행을 통해 파리클럽 대상채무의 절반 정도를 조기상환(buy-back)하는 채무재조정 협상을 일부 채권국과 추진하였음. 이를 통해 폴란드 정부 외채의 만기구조가 개선되고 2006~09년 만기 집중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음.

□ 주요기관의 국가신용도 평가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

- 주요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이 폴란드에 대해 모두 상위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한편, 2008년 2월 S&P는 신정부 출범이후 재정 및 경제 구조개혁 여건 개선, 투자 및 고용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 지속 전망 등을 들어 등급전망을 유지(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나, 10월말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등급전망을 유지(Stable)로 다시 하향조정하였음.

<표 I-6> 폴란드 국가신용도 평가등급 현황(2009년 5월말)

기관	수은	OECD	S&P	Moody's	Fitch
등급	B1	2	A-	A2	A-

자료: 각 기관별 발표자료